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결과 보고서

2023. 0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목 차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 3

1. 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 4

2. 준비 과정 ····· 5
   1) 프로그램위원회 ····· 5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6
   3) 사무국 ····· 9

3. 프로그램 ····· 11

4. 행사 평가 ····· 13
   1) 참석자 통계 ····· 13
   2)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 14

5. 결산 ····· 15

6. 사진 ····· 16

7.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 18

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 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22년에 11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KrIGF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krigf@kiga.or.kr)

1. 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요

o 주 제 : ‘Change Up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o 일 시 : 2023년 7월 7일(금), 9:40~18:00

o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서대문역 부근)

o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o 공동주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비아, 국제사이버법연구회, 사이버안보연구소, 사이버커먼스코리아, 오픈넷,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과 입법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카카오, 트루네트웍스, 한국클라우드앤호스팅협회(총 12곳)

o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카카오, 가비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이버안보연구소, 트루네트웍스(총 7곳)

o 홈페이지 : www.krigf.kr

o 참석인원 : **총** 200명 (참석자 143명(53%), ZOOM 57명(47%))

* 참석자에 각 워크숍 세션 패널 포함

* ZOOM 참석은 로그인하여 시청한 인원만 카운팅 하였으며, 각 세션마다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음

o 주요결과

- (프로그램) ‘Change Up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주제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트랙에서 총 12개 워크숍 세션 진행
- 포럼 사전홍보 및 KISA 내 인터넷거버넌스 역량강화 목적의 교육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도모하여, 청년주도의 세션 진행
- 실시간 문자 자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KrIGF 접근성 보장
- 행사 전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유튜브 채널 업로드 등을 통한 아카이브 등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영상 체계화

2. 준비 과정

1) 프로그램위원회

o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o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오병일(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이수영(위원장), 정책과 입법연구소, 학계
- 김경석, 부산대학교, 기술계
- 전응준, 법무법인 린, 시민사회
- 조진형, 카카오, 산업계
- 이종현, 아시아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VPN), 산업계
- 조부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계
- 전선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부
- 최현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부
- 박노형, 고려대학교, 학계
- 이진, 사이버 안보 연구소, 시민사회
- 이화영, 사이버 안보 연구소, 시민사회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o 2023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1월 27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제68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68-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67-2)
- 2023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확인(KrIGF68-4)
- NRI 보고(KrIGF68-3)
- 2023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활동계획 수립(KrIGF68-5)

o 2월 24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제69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69-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68-2)
- 2023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확인(KrIGF68-4a)
- NRI 보고(KrIGF69-3)
- 2023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전체일정 검토(KrIGF68-5)

o 3월 31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제70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70-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69-2a)
- NRI 메일링리스트 보고(KrIGF70-3)
- 2022년 KrIGF 개최 후 평가내용 공유(KrIGF70-4)
- 2023년 KrIGF 개최 장소 후보 공유(KrIGF70-5)
- 2023년 KrIGF 슬로건, 워크숍에 대한 설문결과 공유(KrIGF70-6)

- 2023년 KrIGF 워크숍 공모 관련 자료 검토(KrIGF70-7,8)

o 4월 28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제71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71-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70-2)
- NRI 메일링리스트 보고(KrIGF71-3)
- 2023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변동사항 공유(KrIGF71-4)
- 2022년 KrIGF 지출내역 검토(KrIGF71-5)
- 2023년 KrIGF 워크숍 세션 모집 관련 중간점검(KrIGF71-6)
- 2023년 KrIGF 개최 관련 자료 검토(KrIGF71-7,8)

o 4월 3일 ~ 05월 7일 : 2023 KrIGF 워크숍 세션 공모 기간

o 5월 2일 ~ 5월 30일 : 2023 KrIGF 서포터즈 모집기간

o 5월 25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제72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72-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71-2)
- NRI 메일링리스트 보고(KrIGF72-3)
- 2023년 KrIGF 세부 소요예산(안) 공유(KrIGF72-4)
- 2023년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참여기관 중간보고(KrIGF72-5)
- 2023년 KrIGF 서포터즈 모집 중간보고(구두)
- 2023년 KrIGF 워크숍 세션 모집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KrIGF72-6)
- 2023년 KrIGF 기획 세션 논의
- 2023년 KrIGF 행사 슬로건 논의 (KrIGF70-6)
- 2023년 KrIGF 전체 프로그램 스케줄 구성 (KrIGF72-7)

- 향후일정 점검

o 6월 8일 : 2023년 프로그램위원회 6차 회의 (제73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73-1)
- 지난회의록 검토(KrIGF72-2)
- NRI 메일링리스트 보고(KrIGF73-3)
- 2023년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참여기관 현황 보고(KrIGF72-5a)
- 2023년 KrIGF 워크숍 세션 제안서 업데이트 현황 공유(KrIGF73-4)
- 2023년 KrIGF 개회식 및 프로그램 타임테이블 논의(KrIGF73-5)
- 2023년 KrIGF 세부 소요예산(안) 공유(KrIGF72-4)
- 2023년 KrIGF 개최(7.7) 전 행사 점검 회의 필요성 검토

o 7월 7일 : 2023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o 8월 18일 : 2023 프로그램위원회 7차 회의 (제74차 회의)

- 의제(안건) 채택(KrIGF74-1)
- NRI 메일링리스트 보고(KrIGF74-3)
- 2023년 KrIGF 워크숍 세션 결과보고서 공유(KrIGF74-4)
- 2023년 KrIGF 서포터즈 활동보고서 공유(KrIGF74-5)
- 2023년 KrIGF 개최결과 보고(KrIGF74-6)
- 2023년 KrIGF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차기 KrIGF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등 기타사항 논의

3) 사무국

o 2023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정길원, KOICS
- 박은하, KOICS
- 김학진, KOICS
- 박성주, KOICS
- 서　윤, KOICS
- 황윤정, KOICS
- 송석빈, KOICS
- 조성은, KOICS
- 송주혜, KOICS
- 박가은, KOICS
- 박지수, KOICS

o (서포터즈)

- 김가영, 영남이공대학교
- 김예원, 상명대학교
- 김유빈, 홍익대학교
- 문필섭, 서울시립대학교
- 우수진, 이화여자대학교
- 유상민, 서울시립대학교
- 유재원, 알리치경영컨설팅
- 이소정, 이화여자대학교
- 한진욱, 씨드콥

4) 페이스북 페이지

o 기존에 페이스북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개인 계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KrIGF의 공식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음

o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krigf.kr/

5) 유튜브 채널 개설 및 KrIGF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

o 과거에 촬영되었던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

o 유튜브 채널 : https://www. youtube.com/@2023KrIGF

6) 문자통역

o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속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함.

o 사회적 협동조합 에이유디(http://www.sharetyping.com/)의 실시간 문자통역서비스 이용.

3. 프로그램

o ‘Change Up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주제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트랙에서 12개 워크숍 세션 진행

트랙1	트랙2	트랙3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시간	내용		
09:40 ~10:20	**개회식**		
	□ **사회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KrIGF 공동위원장) □ **인사말 :** 이동만(KIGA/위원장,KAIST/교수) □ **축사 :** - 조민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 이원욱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영상	□ **개회사** **공공계** – 이원태(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학계** – 박노형(고려대학교/교수) **시민사회** – 이 진(사이버안보연구소/소장) **기술계** – 김경석(부산대/명예교수)	
10:30 ~12:00 (90’)	**1.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2. 국가도메인 정책이슈 공유 및 발전방향 토의**	**3.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
	□ 사회 : 소기옥(도화엔지니어링/기술) □ 발제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시민) □ 토론 : 박영미(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 임태훈(미국샘휴스턴대학교/학계) 윤효진(경동도시가스/산업계) 이진우(창원대학교/학계) 이철우(영화진흥위원회/공공)	□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 한결/시민) □ 발제 : 강경란(아주대/학계)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 □ 토론 : 이정민(KISA) 서영진(아이씨티넷/기술계) 박지환(오픈넷/시민) 이우정(후이즈/산업계) 신중현(아이네트호스팅/산업계)	□ 사회 : 강하연(KISDI/공공계) □ 발제 : 전선민(KISDI/공공계) □ 토론 : 김봉섭(NIA/공공) 정필운(한국교원대/학계) 이선주(NAVER/산업계) 박일준(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시민)
12:00 ~13:00	휴식		
13:00 ~14:30 (90’)	**4. 새로운 인공지능사회의 법률 및 정책적 쟁점 분석과 함의**	**(Youth) 5. 사이버안보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의 발전방향**	**(Youth) 6.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 데이터 주권의 정의와 국제 사회의 다양한 데이터 주권 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시민) □ 토론 : 이철우(영상진흥위원회/공공) 정일진(루트컨설팅/산업) 민재명(D.LAB/학계) 김택원(김택원 세무회계/공공) 박성준(IB파트너스한국법인/기술) 송채원(마켓컬리/산업계)	□ 사회 : 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 □ 자문 : 이 진(사이버안보연구소) □ 역할 : 김근아(숙명여대/UN국장/발제) 최연재(숙명여대/경찰청 과장) 김혜진(숙명여대/김&장 변호사) 이희지(숙명여대/김&장 변호사) 양다연(숙명여대/미외교안보소장) 박상은(숙명여대/국회입법처장) 유채민(숙명여대/인터폴)	□ 사회 :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학계) □ 발제 : 정다현, 순소영, 임주영, 박해든(이화여자대학교/청년) □ 토론 : 이인호(중앙대학교/학계)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 심동욱(한국인터넷진흥원/공공계)
14:30 ~14:40	휴식		
14:40 ~16:10 (90’)	**7.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Youth) 8. 이상적인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모델 구축 논의를 위한 워크숍**	**9.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방향**
	□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 □ 발제 : 전응준(법무법인 린/시민사회) □ 토론 :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창작자) 이예림(업폴/업계)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계)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공공)	□ 사회 :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학계) □ 발제 : 이예진(이화여자대학교/청년) □ 토론 : 김영진(드림시큐리티/산업계) 이창범(김앤장 법률사무소/시민) 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시민)	□ 사회 : 정일진(루트컨설팅/산업) □ 토론 : 한성철(코리아머천트쉬핑/산업) 김윤지(부산제일경제/언론) 김지윤(숙명여대/시민) 이현진(단국대/청년) 김진식(아주대/기술계) 박종민(종보통신산업진흥원/공공) 김채린(서울대/청년)
16:10 ~16:20	휴식		
16:20 ~17:50 (90’)	**(Youth) 10. AI 거버넌스의 이슈와 한국의 대응방안**	**11.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규제: UN조약의 협상을 중심으로**	**12.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 사회 : 유인태(단국대학교/학계) □ 발제 : 황동준(단국대학교/학계) 김현주(단국대학교/학계) 이주원(단국대학교/학계) □ 토론 : 최종원(숙명여대/학계)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법조계)	□ 사회 : 박노형(고려대학교/학계) □ 발제 : 오선영(숭실대학교/학계)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공공) □ 토론 : 오시진(강원대/학계) 김효권(고려대/학계) 진우경(경찰청/공공)	□ 사회 :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시민사회) □ 토론 : 황교욱(前경남연구원/공공계) 여인표(메타플래그/산업계) 김다예(국립목포대학교/청년) 김민찬(초코뮤직/기술계) 이동학(쓰레기센터/시민사회) 조영우(우짜/기술계) 박슬기(지금지구/시민사회)

o 온라인(Zoom) 참석 패널 파란색 표시로 구분

o 세부적인 워크숍 세션 논의 결과는 [7. **워크숍 세션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행사 평가

1) 참석자 통계

o 총 사전등록자 : 218명 /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 인원 : 27명

o 참석인원 : **총** 200명 (참석자 143명(71%), ZOOM 참여 57명(29%))

* 참석자에 각 워크숍 세션 패널 포함
* ZOOM 참여는 로그인하여 시청한 인원만 카운팅 하였으며, 각 세션마다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음

2) 만족도 조사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총 27명 응답)	공공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이용자
	22.2%	18.5%	25.9%	18.5%	3.7%	11.1%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여 경험		
	있음	40%
	없음	60%

3. 워크숍 세션 만족도 (오전 세션)	워크숍	내용 유익성	시간 적절성
	워크숍 세션 1 (17명 응답)	93.7%	87.5%
	워크숍 세션 2 (4명 응답)	75%	75%
	워크숍 세션 3 (4명 응답)	75%	75%

4. 워크숍 만족도 (오후 세션)			
	워크숍 세션 4 (11명 응답)	80%	80%
	워크숍 세션 5 (8명 응답)	57%	84.6%
	워크숍 세션 6 (4명 응답)	75%	100%

5. 워크숍 만족도 (오후2 세션)			
	워크숍 세션 7 (9명 응답)	90.0%	90.0%
	워크숍 세션 8 (8명 응답)	75%	75%
	워크숍 세션 9 (6명 응답)	100%	100%

6. 워크숍 만족도 (오후3 세션)			
	워크숍 세션 10 (6명 응답)	83.3%	83.3%
	워크숍 세션 11 (11명 응답)	80%	80%
	워크숍 세션 12 (1명 응답)	100%	100%

7. 행사장 및 서비스 만족도	행사장 시설 (22명 응답)	68.1%

7. 기타 의견	- 211호, 212호 사이 방음이 안 되어서 불편했음 - 게임 관련 세션이 없어서 아쉬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됨 - 세션이 1시간씩 진행되어도 좋을 것 같음 - 노트북 충전이 불편했음 - 정책, 제도적으로 확산되길 바람 - 작년에 만족하여 올해도 참석, 진행하는 분들 친절하셔서 포럼 내내 편안했음. 내용이 알차고, 유익함. 특히 YOUTH 가 인상적 - 자료집을 주었으면 좋겠음. - 옆방과 방음이 안됨 - 온라인 참여자 목소리보다 옆 세션 소리가 더 또렷함 - 세션에 대한 정보 부족,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많지 않음 - 토론자의 직접 참석 바람, 온라인 참석 지양 - 시간이 부족하여 청중의 말할 기회가 없던 것이 아쉬움 - 식권,카페이용권 제공 덕분에 식당을 찾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음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 2023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자체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오병일) 올해 참여 인원은 적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장소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대부분 만족하였음. 추후 예약 시 방음 문제를 고려하여 다른 층을 예약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KISA) 세 개의 트랙이 모두 한 층에 있어서 이동도 편했으며,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였음. 무엇보다 일반인 참석자들이 참여하기에 괜찮았던 것으로 보임
- (오병일) 로비가 넓었고, KrIGF 참석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 혼잡하지 않았고, 카페의 위치도 바로 밑이어서 편리했음
- (KISA) 설문지를 등록데스크에서만 배포하지 말고 내년에는 각 방마다 배치하여 스탭들로 하여금 나눠주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함
- (오병일) Youth 세션과 일반 세션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선민)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마이너스 상태인데 3개의 트랙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2개로 줄이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함
- (김경석) 예산을 현 상태에서 더 늘리기 어렵다면, 결국 세션 수를 줄여야 될 것으로 보임

5. 결산

제12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세부지출 내역

'23.08.18(금),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사무국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원)	예산(원)	비고
행사장 임대료	행사장/사무국대기실등	4실	-	3,168,000	
전문가활용비/인건비	세션별 문자통역비	1식	-	1,856,250	
	서포터즈 지원비	9명	100,000	904,500	
	현장 지원인력	10명	150,000	1,503,500	교육일 포함(1.5일)
	영문 번역비	1식	-	1,000,000	예정
온라인생중계/장비임차	유트뷰/줌 생중계운영	1식	-	7,000,000	사진촬영 포함
	노트북 대여	8대	50,000	400,000	
중식 및 다과등	참가자 중식/다과,음료등	1식	-	3,064,200	프로그램위원 저녁포함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홍보/웹자보/현수막/배너/포스터 제작등	1식	-	2,825,360	
기프트카드, 인쇄 및 사무용품등	인쇄,문구류,명패,명찰 등	1식	-	2,844,030	
총 지출금액				**24,565,840**	

※후원 현황: 카카오(250만원), 가비아(100만원), 트루네트웍스(100만원) 등 450만원

- 사업비: 17,000,000원(예산) + 4,500,000원(후원금) = 21,500,000원

6. KrIGF 행사 사진

1) 개회식

2) 트랙1

3) 트랙2

4) 트랙3

7. 워크숍 세션별 결과보고서

작성자 : 이수영

세션명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일시	2023. 7. 7. (금), 10:2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소기옥(도화엔지니어링/부회장)	발제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의장)
	패널	박영미(전 한국자산관리공사/이사)		임태훈(미국샘휴스턴대학교/교수)
		윤효진(경동도시가스/법무담당)		이진우(창원대학교/연구원)
		이철우(영화진흥위원회/변호사)		

제안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산업, 제품, 서비스 등은 경제 사회 구조의 혁신과 전환으로 이어져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사회, 경제적 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미래 전략이자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활용의 양극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 사생활 침해 및 데이터의 오남용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높다. 이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신뢰와 공정 기반의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부합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
요약내용	이수영 : 인공지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대전환의 본질이자 바탕일 것입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의 재편, 시장 질서와 규제의 변화, 경제적 양극화와 고용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 소비자의 선택 등 경제활동 전반은 물론 인간의 사회관계와 문화, 그리고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 질서까지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보안 문제와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제대로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저작권, 그리고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SNS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관심있을 법한 내용을 분석해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차 산업혁명 당시는 기계화, 2차산업혁명은 대량생산, 3차산업혁명은 지식정보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으로 지능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이는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 시스템의 혁신으로 새로운 사회구조를 구상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객관적이지 않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차별성과 편향성, 불공정성과 비도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판단은 옳은 것이며, 그 전제는 당연히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인공지능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듯이, 인공지능의 활용에서도 가치편향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신뢰할 수 없다면,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잘못된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건성(Robustnes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라이버

	시(Privacy), 인공지능의 판단의 구체적 요인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계층을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 활용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제공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투명하게 고지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통지하고, 정보 접근 권한과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AI의 본질은 알고리즘이고, 인공지능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자의 의도에 벗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I를 활용해 음성과 영상을 가짜로 생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뢰성과 윤리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우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편견 없이 공정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인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유하자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기술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양질의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과 ICT기술 등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초연결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사회, 그리고, 책임성, 유연성, 신뢰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결국, 정책과 입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잘 작동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새로운 디지털 변화 속에서 '진입장벽'이 아닌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혁신역량과 의지를 고무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하고, 차별없는 법과 규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AI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기술이 사람을 위해 개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 on demand 형태의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편적 설계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 모든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미 : 지식정보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경험, 기술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된 사회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격차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초연결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 가치'에 기반을 두고, 또한 가짜뉴스 같은 정보의 팩트체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기초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효진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비용 절감 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별 투자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상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도입 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용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진우 :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일자리를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 2016년 기준, 미국 전체의 직원 중 대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빨리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시대에는 단순 노동에서만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

	했는데, 이제는 고소득의 전문직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도 일자리 위협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예술의 창의성에서도 딥러닝을 통한 화풍을 학습하여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경우에는 인간보다 정확하고 정교하며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하는데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 능과 신기술 습득 차이에 따라 세대 간 또는 개인 간 불평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독점하고 많은 이익을 차지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90년 미래계급 전망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인공지능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4개의 계급 분류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프레키 아트(precariat)' 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99.997% 제4계급은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긴 그 사회의 대다수 인간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제3계급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한 인공지능이고요~제1계급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거나 최 첨단 기술을 소유한 0.001%의 기업인들로 구성 사회 전체의 부와 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2계급은 제1계급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기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제4계급의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 변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우리가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가 고도화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창작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게임 유저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캐릭터 일러스트를 인공지능이 만든게 아닌 것인가?라는 건데요. 성의없이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로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누가 만들었느냐? 창작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느냐가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앞의 패널 분들이 인공지능과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태훈 : 인공지능에 대해 세계은행과 미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하시는 분?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루에 두차례 이상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위협적이지만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분? 대충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높은 연령대 분들은 긍정적 인식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AI와 함께하는 미래인데요~ 긍정적인 청소년 비중이 93%를 넘습니다. 신뢰는 64%, 80%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제어 같은 경우도 76% 가량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주고받는 미디어, 인공지능 상호작용에 대해 청사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4가지 답변이 있는데 중첩되서 줄이겠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효율성, 최적화 등으로 산업에 혁신을 줄 것이고, 디지털 헬스 케어에서 맞춤형 치료, 의료기술 개발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고, 지능형 도시계획, 스마트 교통, 도시가 더욱 첨단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주는 건데, 학습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몰입감있는 학습을 위한 AR, VR과의 결합입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챗GPT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은 공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군사적 활용 가능성 등이 그렇습니다. 대학에

	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경험을 말씀드리면요~근래 명문사립대 학생들이 컴공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과에 줄을 세우는데요~ 의대, 약대를 그다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취업하는데요~ 약 4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나의 역할? 생산자로서의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로서의 나 자신? 기업의 일부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방향일 수 있어요~ 소비자로서의 나의 역할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플로어 질문 후, 이수영 답변 사실, 저는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시대변화에 맞추어 바꾸어야 하는데, 법이 현실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장질서를 잘 만들어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에서의 활용은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공지능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이 인공지능을 통한 SDGs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의료보건의 접근성과 같은 인권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어 질문 후, 임태훈 답변 때늦은 대응이 아닌가? 늘 늦었던 것 같습니다. 두차례 세계대전 이후UN의 창설과 같은 것이죠. 어느 한 국가의 정부도 인공지능을 통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통제하면서 개발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제3국도?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인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하면 큰 일을 하는 줄 아는데, 국가를 초월한다기 보다 국가의 요구를 신탁기금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여론 조성의 역할을 하고,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주도하고 행사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논의 세부 내용	◎ 주요 쟁점 일상생활에서 AI는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며, 변화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일자리를 빼앗거나 줄일 것인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의 활용범위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 인공지능의 신뢰성,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워크숍 총평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우러져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으나, 상호 간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이 이어진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공지능 전반을 이해하기위해 준비된 워크숍으로, 발제와 토론 이후, 플로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점도 상당히 좋았다고 평가됨.

작성자 : KISA 인터넷주소정책팀 김예찬

<table>
<tr><td>세션명</td><td colspan="4">국가도메인 정책이슈 공유 및 발전방향 토의</td></tr>
<tr><td>일시</td><td colspan="2">2023. 7. 7. (금), 10:30~12:00</td><td>장소</td><td>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td></tr>
<tr><td rowspan="4">참석자</td><td>사회</td><td colspan="2">윤복남 변호사(법무법인 한결)</td><td>발제</td><td>강경란 교수(아주대학교),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td></tr>
<tr><td rowspan="3">패널</td><td colspan="2">박지환 변호사(오픈넷)</td><td colspan="2">서영진 이사(아이씨티넷)</td></tr>
<tr><td colspan="2">신중현 대표(아이네트호스팅)</td><td colspan="2">이우정 팀장(후이즈)</td></tr>
<tr><td colspan="2">이정민 인터넷주소정책팀장(KISA)</td><td colspan="2"></td></tr>
</table>

<table>
<tr><td>제안내용</td><td>
○ 제안취지
- 3단계 국가도메인 중 비영리영역의 도메인 or.kr은 「도메인이름관리준칙」[별표1]에 의거 비영리 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 가능함. 현행 준칙상 비영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도메인은 절차에 의해 말소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등록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손실을 방지하고,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영역의 도메인(or.kr) 고유의 이미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지역도메인(seoul.kr, chungnam.kr 등)의 문자 길이가 길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자길이를 축소(daegu.kr →dg.kr)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최근 5년 간 국가도메인 등록건수는 매년 약 110만 건으로 국가도메인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해 .ai(앵귈라) 등 최근 트렌드 키워드인 국가도메인은 2022년 말 대비 2023년 5월 현재 등록건수가 약 22% 상승함. 이에 시장 수요에 따른 공공2단계 도메인*을 신규 생성하여 시장 활성화 및 국가도메인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3단계 kr도메인에서, or.kr, ac.kr 등과 같이 최상위도메인(Top Level Domain) .kr 다음 단계(2nd Level)에 위치한 .or(비영리), .ac(학교), .mil(국방) 등 사전에 정해 놓은 도메인으로, 해당 영역의 성격을 나타냄
- WHOIS검색 서비스는 초기 인터넷 웹페이지 이용자들끼리 서로 손쉽게 연락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서비스임. 최근 개인정보보호 등 시민들의 디지털 인권이 향상되면서 WHOIS검색 서비스를 통해 등록인의 이름, 주소, 책임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공개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WHOIS검색 서비스의 목적, 사회적 이익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WHOIS검색 서비스 정책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쟁점
</td></tr>
</table>

	- 비영리 도메인 자격제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의 비교형량 - 지역도메인 문자길이 축소에 대한 의견 - 신규 공공2단계 도메인 생성에 대한 의견 및 생성 시 생성절차에 대한 의견 - WHOIS검색 서비스의 개선 방향
요약내용	○ 3단계 국가도메인 정책 이슈(발제 : 강경란 교수) - or.kr 도메인은 비영리 개인 또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임. 이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 시 KISA가 제재를 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행정 손실 및 콘텐츠 규제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영리 도메인을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지 논의 중임. 이를 위해서는 or.kr 도메인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인식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을 변경하더라고 기존에 비영리 도메인 사용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역도메인 축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가 매우 적고, 이미 공공기관의 경우 go.kr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메인 활성화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공공2단계 도메인 도입은 정체된 도메인 시장에 활기를 줄 것이라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도메인 이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음. ○ WHOIS검색 서비스와 개인정보(발제 : 오병일 대표) - WHOIS검색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부동산 등기와 같이 사용자개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공시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오픈API를 통해 스타트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을 수 있음. 세계적인 추세는 WHOIS검색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해외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논의 세부 내용	○ 3단계 국가도메인 정책 이슈 토론 - (신중현) 새로운 도메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새로운 도메인 생성을 위한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으면 좋겠음. or.kr에 대하여는 현재 or.kr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등록인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함. - (이우정) or.kr은 비영리법인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시장의 상황은 개인 등록인의 경우 or.kr의 영역 구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음. 단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음. 지역도메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업계는 환영하나 과연 등록건수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공공2단계 도메인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ai.kr 등 3단계 도메인은 여전히 길기 때문에 .ai처럼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음. - (박지환) 비법인 사단은 고유번호증이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임. 느슨한 연대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or.kr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준을 정해서 단체성(1인 이상)을 입증(모임통장 등)하면 되고, 등록 단계에서 입증하는 것보다 등록 후에 추후 입증하는 체계로 변화했으면 좋겠음. 비영리 단체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결국 영리·비영리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 삼지 않았으면 함. 해외에서도 입증 기준이 모호한 편임. 공공2단계 도메인 신규 도입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음. - (서영진)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역도메인의 경우 두 글자로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는 고려해 보아야 함. 긴 글자과 짧은 글자가 상호 연동되는 것이 운영의 표준이 되도록 해야 함. 신규 공공2단계 도메인 생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주소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위임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함. or.kr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주제임. 우리가 or.kr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위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기존 사용자들의 보호는 있어야 한다고 봄. - (이정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등록자격 위반 or.kr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것이고, 이 경우 등록대행자에게 영리 또는 비영리적 사용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정책 위반 시 말소함.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KISA가 처리하면 되

지만, 현재의 모호한 정책으로 인해 유발되는 민원의 경우 정책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KISA는 콘텐츠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영리・비영리의 판단을 위해 or.kr 도메인을 통해 접속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확인함. 다른 나라의 경우 비영리 도메인에 대한 등록 조건은 있지만 등록 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본과 같이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한 나라도 있음. 공공2단계 도메인 추가 생성은 최초 kr도메인을 3단계 체계로 도입할 당시부터 확장성을 고려했던 것으로, 공공2단계 도메인 생성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메인을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체된 도메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반참석자 의견1) 지역도메인의 경우 문자 길이가 축소된다고 해도 과연 시민들이 접근하기 유용할지 의문이 듦.
- (일반참석자 의견2) 도메인은 아이덴티티가 있음. or.kr은 비영리라는 인식이 있는데 비영리 영역이라는 기준을 없애면 피싱에 악용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국제적인 인식도 or은 비영리라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함. 지역도메인은 니즈가 있는지 궁금함. 공공2단계 도메인 도입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 WHOIS검색 서비스와 개인정보 이슈 토론

- (서영진)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WHOIS정보공개 등이 있는데, 웹 크롤링 등 막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도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기술적으로는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오픈 API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도메인이름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배제한 도메인 등록 정보 제공 등 양자를 다 고려해야 함.
- (이우정) 적절한 정보 수집과 공개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집 목적부터 살펴보아야 함. 개인적으로 도메인이 가지는 의미가 법적 권리의 대상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고, 한시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압류・가압류・양도・담보의 대상이 되기도 함. 도메인은 단순한 제도상의 부산물이 아니라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수사・사법기관에서 도메인 등록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국가도메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WHOIS는 공시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능성 있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메일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이정민)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웃한 일본의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인 JPRS에 문의한 결과, 국가도메인 정책에 있어서 일반도메인 정책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는 입장이었음. WHOIS 정책에 대해 일반도메인 정책을 마냥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윤복남) WHOIS는 공시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도 있음. 따라서 두 개 가치의 조화가 필요함. - (이동만) 각론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주요 내용부터 정해야 할 것임. 국내에서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이슈가 생길지 멀티스테이크홀더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논의해야 함. 학술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설정해야 제도적인 근거가 생길 것임. 과거 많은 부분 ICANN에서 논의된 정책의 국내화를 추진해 왔는데, WHOIS 정책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국제사회에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워크숍 총평	- 여러가지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논의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학계·시민·기술계·공공·산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관점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었음. - 비영리 도메인 등록자격 개선 문제는 기존 비영리 도메인 사용자의 이익과 or.kr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 - WHOIS 검색 서비스의 개인정보 공개 정책은 이용자의 이용목적과 필요한 정보(항목)부터 파악해야 함. 또한, 일반도메인 정책을 그대로 국가도메인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작성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세션명	디지털 변혁기의 디지털 포용			
일시	2023. 7. 7. (금), 10:30~12: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202호)
참석자	사회	강하연(KISDI 연구위원)	발제	전선민(KISDI 부연구위원)
	패널	(공공) 김봉섭 (NIA 연구위원)		(산업계) 이선주 (NAVER 웹접근성 전문가)
		(학계)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시민사회) 박일준(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회장)

제안내용	ㅇ **(제안 배경)** - UN, ITU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격차 해소의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의 격차해소에 있어 지구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상황임 - 단순히 연결성 증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과 활용의 사회경제적 역량의 고도화 문제, 즉 유의미한 연결성(meaningful connectivity)의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디지털 포용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단순한 접근성 및 연결성 문제에서 나아가 급속한 디지털 변혁의 가장 선단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자 함 ㅇ **(목적)**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글로벌 담론으로부터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변혁기의 디지털 격차 관련 도전과제, 국내의 디지털 포용 대응 및 모범사례 파악
요약내용	ㅇ 대표 발제: 정보격차에 대한 글로벌 담론과 국제기구의 노력(UN 및 ITU 중심) 및 디지털 변혁에 따른 당면 과제, 디지털 포용을 위한 대응 방향 ㅇ 디지털 번혁기의 디지털 포용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공공/학계/산업/시민사회) 의견 공유 - (공공) 한국의 디지털 연결성 현황 및 과제 · 한국의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 주요 결과 공유 및, 새롭게 야기되는 디지털 격차 동향과 도전과제 - (학계) 한국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기존 정보격차해소에서 디지털포용으로 확대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법안" 주요 내용 및 이슈 - (산업계)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 네이버 웹접근성 향상 지원을 위한 널리(NULI) 접근성팀 활동 - (시민사회) 디지털 포용관련 시민 사회의 시각 · 디지털리터러시관련 협회 주요 활동 소개 및 시민사회의 시각 ㅇ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진행
논의 세부	**[대표 발제] - "디지털 번혁기의 디지털 포용" / 발표자: 전선민 (KISDI 부연구위원)**

내용	ㅇ ITU(2022)에 따르면 전 세계 49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COVID-19로 범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디지털 연결성의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으로 연결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활용 격차(Usage gap)'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모두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포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연결(meaningful connectivity)이 필요 - UN에 따르면, 유의미한 연결은 인프라, 가격 적정성, 장비, 역량, 안전성과 보안 5가지 지표로 측정되며, 이를 종합하여 크게 3가지 수준(none-basic-meaningful)으로 나뉨 ㅇ UN과 ITU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특히 2024년 채택 예정인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모두를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공유 원칙')에서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 달성을 위한 기본 이해를 같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ㅇ 한국은 ITU, OECD 등의 통계에서 디지털 연결성에서 전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ICT 역량 고도화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패널 발표]** **ㅇ (공공) "한국의 디지털 연결성 현황 및 과제" / 발표자: 김봉섭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 연구위원)** - 디지털 격차란, 정보를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의 격차를 의미하며, 일반 국민과 주로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 간 정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개념에서 출발.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의 가난에 대한 구분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가난'에 해당 -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속적인 신규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야기시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예.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의 활용 등) - 또한, 인터넷 이용을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정보 접근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등에 기반 하였을 때, 디지털 격차를 확인 시 단순히 정보화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정보 접근 수준을 비교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디지털 격차 현상은 단순한 불편성이 아닌 불이익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생존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진정한 디지털 포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ㅇ (학계) "한국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법제도 등)" / 발표자: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우리나라는 기존 취약계층, 정부주도, 정보격차 해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수립·이행해 왔으나, 현재는 전국민, 디지털 사회의 모든 구성원, 디지털 포용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법안 심사 중인 '디지털 포용 법안'임 -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 설치 혹은 지정, 디지털역량교육 지원,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실시' 등이 포함됨 - 키오스크의 확산, QR 체크인, 배달앱 등 새로운 디지털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포용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공감 - 하지만 신기술의 출현 혹은 이슈 발생 시마다 관련된 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양적·공급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ㅇ (산업계) "네이버 접근성 활동 현황 공유 및 향후 방향" / 발표자: 이선주(NAVER 널리 접근성팀 웹 접근성 전문가)** - NAVER 널리 접근성팀은 접근성 관련 온/오프라인 체험관 운영, 동영상 블라인드 매뉴얼 등 접근성 서비스 제공, 널리 세미나 개최, 모두를 위한 웹·앱 접근성 동영상 교육 제공, 접근성 고객센터 운영 등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다'라는 모토 아래 모든 이를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에 있음 -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변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생태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NAVER는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 네이버의 AI 의 세부 기술들이 널리 모든 사람을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 **ㅇ (시민 사회) "디지털 포용관련 시민 사회의 시각" / 발표자: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회장** -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는 2016년부터 구글(Google)이 본사 차원에서 지원해 온 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인재와 디지털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동 협회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서 발간, 교사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초중고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메타버스 활용 국제 교류 및 문화 교육,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활동, 해외 국가 ODA 교육 사업등을 수행 중에 있음 -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디지털 환경과 역량 구축이 필요 **[Wrap-up]** o 전 세계적 디지털 변혁 가속화 속에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포용 이슈는 국내가 아닌 글로벌적인 공통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 추진 등 해당 부문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나, 현재 관련한 국제 담론에는 적극적 기여가 부족한 현실임 o 국제 차원의 담론 및 활동과 더불어, 국내 관련 노력들이 이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한국이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워크숍 총평	o 동 워크숍에서는 급속한 기술의 발전, 코로나 위기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막대한 파급력 속에 간과되어서는 안될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인식과 이의 해소를 위한 접근을 논의함 o 글로벌 ICT 강국으로서 인정받는 한국 역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디지털 격차의 함의를 인식하고 법률 제정을 포함한 선도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도 이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의미있는 연결로 정의되는 현재의 디지털 격차 해소는 글로벌 아젠다이며 한국은 이러한 정책, 경험 및 성과의 공유를 통하여 글로벌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o 디지털 전환기에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매우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는 공통의 이해가 있었음 o 저개발국 뿐 아니라 농촌인구, 노년층, 여성,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하에 세심하게 설계된 솔루션과 지원 프로그램도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연대될 수도 있을 것임 o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발전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놓치지 말아야할 것임 o 특히 디지털 전환과 같이 매우 빠르고 패러다임 전환적으로 발전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큰 관심, 주의, 협력 및 연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작성자 : 이수영

세션명	새로운 인공지능사회의 법률 및 정책적 쟁점 분석과 함의			
일시	2023. 7. 7. (금), 13:00~14: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의장)	발제	
	패널	이철우(영상진흥위원회/변호사)		김택원(김택원 세무회계/공동대표)
		정일진(정글17/대표)		민재명(D.LAB/연구위원)

제안내용	인공지능은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 도시,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진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 역시 매우 많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사고의 확증편향과 딥페이크 영상피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등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 과다 대표,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전략 기술로서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활용의 보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증대했으나,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지위,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프라이버시 등 인권 보호 등 법과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세션은 인공지능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법적 책임 귀속,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 등 다양한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내 제도 정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약내용	◎ 주요 쟁점 1.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해줄 미래에 대한 전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과 지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격 주체성, 책임능력 등 3.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쟁점 사항들은 무엇인가? – 민형사적 책임 귀속, 차별 및 인권 침해, 저작권 보호, 기술 격차, 정보접근,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4.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진전될수록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5.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어떤 원칙과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논의 세부 내용	이수영 :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자 krIGF의 공동위원장인 이수영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혁신이냐 규제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과 제도는 규제와 조정이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지원과 육성, 조성과 진흥의 역할도 함께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규범적 가치 판단의 기준 화립을 위해 멀티스테이크 홀더들의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흥미롭고도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봇팔은 사물일까요? 우리 신체의 일부로 봐야할까요? 행위자는 사람인가요? 인공지능인가요? 그리고 이를 파손한다면 기물파손일까요? 과실치상일까요? 여기서, 과실치상은 형

	법 제266조(과실치상)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인공지능은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 디지털 정보 활용 격차,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확증편향과 차별,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 등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활용의 보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증대했지만, 법과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션은 인공지능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법적 책임 귀속, 알고리즘 규제 필요성 등 다양한 법적, 정책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의 법적 개념, 지위,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프라이버시 등 인권 보호 등 인공지능에 대한 쟁점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약 15가지의 인공지능사회의 법률과 정책의 쟁점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책임 귀속문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인공지능 창작성 인정과 저작권보호, 기술경쟁의 제한성, 인공지능 판단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 감시사회 문제, 허위정보 유포와 커뮤니케이션 왜곡, 보편접 접근성의 보장, 자율무기의 규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 조세 및 재분배 등입니다. 우리 세션은 모든 분야를 다루기 보다 사전에 현안의 중요성에 따라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우 : 본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저는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한 일을 해오던 법률가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사회가 도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사회 문제를 예측해 본 후,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 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쟁점을 더 세분화하여 보면,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 여부, 3) 인공지능 창작물이 기 존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 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인간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린 그림, 고양이가 찍은 사진, 번개나 파도가 만든 조형 따 위는 고가에 거래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저작물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것 인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물 또한 마찬가지로 저작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았 을 때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강하게 보호하면 창작자의 창 작의 자유의 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생성물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생성될 수 있고, 그 생성 속도와 학 습능력은 전적으로 자본과 기술에 맡겨져 있어 몇몇 기업들이 독점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본다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 며, 우연 또는 의도된 결과로 생성된 인공지능 창작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경우, 이는 대상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화풍이 나 문체, 아이디어 등이 유사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즉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CHAT GPT'를 이용하다 보면, 이따금 AI가 완전히 허위의 정보를 사 실인양 이야기하는 상황을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의 관 리자나 이러한 허위 정보가 완전히 사실이라 믿고 이를 공연히 퍼트린 사 람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먼저 적어도 CHAT GPT의 관리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의 책임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동원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용자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를 진실하다고 믿고 열심히 퍼나른 이용자는 어떨까요? 현 재로서는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그 자체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법적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만,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은 '법인'처럼 인격권 중 명예권이나 성명권, 재산권 등에 관하여는 이 를 향유할 수 있는 법인격이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며, 법인격이 부여되 지는 않지만 완전한 물건으로 취급받지도 않는 반려견, 길고양이 등의 '동 물'과 같은 지위에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물도 인공지능도 제한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법을 떠나서도 무슨무슨 주식회사니 하 는 법인보다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인간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는 법인격을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여기고 있습니다. 기한 법적쟁점 이외에도,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는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 등의 문제나 데이터 편향성과 정보 격차의 심화, 연구 윤 리의 문제 등의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법적 영역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인식이나 교육, 기술 적 조치 등에 관한 정책방향성의 논의와 가까운 부분이라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토론자 분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이점이 지나 정말 초인공지능 사회가 실현된다면 당 장 헌법부터 민법, 형법, 저작권법 등등 모든 법제를 전부 펼쳐놓고 손보아 야 할 정도로 법률영엑에도 큰 파급효과가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법령정비는, 바로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그 개발과 이용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으로 인공지능 에 관한 국가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른바 '인공지능 기본법'의 마련일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꽤나 존재하지만, 오늘 토론 과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인공지능 기본법'에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사회적 논의와 숙고, 그리고 우려에 대한 방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진 :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법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운리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경각심을 줄 것인가? 고민이엇는데요! 가짜뉴스에 당해본 적이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도 나온지 되었는데,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보활용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보입니다. 법인격을 준 순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도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오토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어디까지 만들 것인가를 예측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등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타인을 사칭하고 도용하는 방법이 사진을 가져오는 데서 넘어서서 사진을 학습시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택원 : 안녕하세요 김택원 세무사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세무회계 시장의 현 황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무회계 시장은 흔히 말하는 AI를 통해 단순 업무가 많이 대체되고 있 는 상황입니다. 대체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고하는 업무 중 단순 업무 부분입니다. 국세청과 사설업체를 통해 이 부분은 조금씩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국 세청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두채움'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 분들에게 도움이 드리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합산 신고의 경우, AI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설업체에서 개발한 AI를 통한 환급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납세 자분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해 많이 알려지고 실제 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세무대리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장 이라는 부분으로,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산화라는 과정과 인공지능이라는 과정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은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및 통장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서 변화하여 이제는 전산 데이 터를 통해 자료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되어 현재 AI가 회계 처리를 대신해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거래 별로 회계처리를 미리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기장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상황에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AI가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고서 및 회계처리의 오류가 조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류에 대 해 납세자분들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더 발전되면, AI 의 인격 및 책임 소지도 한 번쯤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명 : Post AI시대 AI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과거 국제정치는 정치외교의 관점, 현재 국제정치는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미래 국제정치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학 (地政學) 시대에서, 기술 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 다. 앞으로는 기술을 장악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패권이 재편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기술변화가 초래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은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게 다 바뀌는 대전환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지정학 시대의 규제가 기정학 시 대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 는 미래전략 기술인 인공지능(AI), 양자,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다. 다른 국가 에 의하여 위 기술들이 종속된다면 군사·경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

	다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 발전 혹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 라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정책 전면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숍 총평	-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이슈에 따라 이해관계자별로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법적 정책적 쟁점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특히, 플로어와의 소통,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다방면의 측면에서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함. - 다만, 많은 이슈를 다루었다는 측면에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는 있으나 심도 깊은 논의가 부족한 점 역시 아쉬웠다고 생각함.

작성자 : 이화영

세션명	(YOUTH) 사이버안보 관점에서 인터넷거버넌스의 발전방향			
일시	2023. 7. 7. (금), 13:00~14: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사이버안보연구소 이화영	발제	숙명여자대학교 김근아(UN 국장)
	패널	숙명여자대학교 최연재(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과장)		숙명여자대학교 양다연(미외교안보소장)
		숙명여자대학교 박상은(국회입법조사처장)		숙명여자대학교 김혜진 (KIM&CHANG 수석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이희지(KIM&CHANG 수석 변호사)		

제안내용	인터넷거버넌스는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관리체계를 통한 인터넷의 확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인터넷의 확장과 그에 따른 기술 발전정책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이 생활기반 전반과 밀접해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범죄의 영역 또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거버넌스가 인터넷의 확산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을 펼쳐 건전한 사이버 공간조성에 일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세션에서는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국내의 상황과 현행법 및 수사 현실 등을 분석하고 인터넷거버넌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요약내용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진화할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공조 협력을 얻기 위해 부다페스트 조약의 가입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지만 정작 가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국내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준비는 미비한 상태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도메인이름 관리 준칙 5장 2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열람이나 제출 요청하는 법안**과 형사소송법 제106조 **법원이 압수하는 것에 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Cloud Act법을 따르고,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나라의 공조 협조를 위해서는 기존 공조 절차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므로 단순한 절차를 위해 **담당 부서끼리 직접 연결**되어 효과적인 정보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항이 **제2추가의정서의 8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비교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수색영장의 개정이 필요하다. -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위해서 국내법은 첫째, 법적으로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형사사법공조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정보의 빠른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논의 세부	**1. 주요쟁점** 1) 건강한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첫 시발점을 왜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 수

내용	사의 국제 공조를 위한 조약) 가입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3) 과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가? 4) 이에 따른 국내법 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5)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 전과 후) 사이버상의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것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는가? **2. 내용** 사이버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인 부다페스트 조약은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 공조를 위한 조약으로, 사이버범죄 수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 사이의 신속한 수사공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1년 유럽평의회를 통해 채택되었고, 2023년 4월 기준 68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이러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한국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코스타리카와 스리랑카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이고 국제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즉각적인 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능적으로 진화할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적 공조 협력을 얻기 위해 부다페스트 조약의 가입의 당위성은 확보되었지만, 정작 가입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국내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준비는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급격한 사이버공간의 범죄 발달에 발맞춰 최근 **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제2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제2추가의정서의 조항으로는 제6조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관할권의 등록 기관에 직접 요청, 제7조 가입자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 협력, 제8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의 수정을 주장한다. 이전까지는 트래픽 자료 가입자, 자료 호스팅 서비스, 내용 저장된 이메일, 자료만을 요청해서 범죄를 수사했으나, 6조에 의해 도메인 정보가 추가될 경우 도메인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수사 대상을 좁힐 수 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도메인 등록대행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6개의 업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 6개의 업체가 있다. 이러한 업체들과 공조할 경우 사칭 서비스나 해킹 등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조한다면 수사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5장 2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7조는 가입자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 협력이다. 범죄자의 도메인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좁힌 후 가입자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업체와 직접 협력하여 범죄자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의 속도가 진척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열람이나 제출 요청하는 법안과 형사소송법 제106조 법원이 압수하는 것에 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8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Cloud Act’에 대해 먼저 다루었다. 클라우드 기업의 경우, 데이터 서버가 특정 한 나라가 아닌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클라우드 기업의 해외 서버에 직접 접근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다른 나라의 협조를 위해서는 기존 공조 절차가 복잡하므로 단순한 절차를 위해 영장 없이 담당 부서끼리 직접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loud Act가 통과되었다.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Cloud Act 법을 따르고,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공조 협조를 위해서는 기존 공조 절차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므로 단순한 절차를 위해 담당 부서끼리 직접 연결되어 효과적인 정보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항이 제2추가의정서의 8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가입자 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비교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113조 압수·수색영장의 개정이 필요하다.
워크숍 총평	사이버범죄협약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 전문가 역할을 통해 잘 분석했고 관련된 자료와 정보 수집이 훌륭하였다. 건강한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조약)가입의 필요성과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공조를 위해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국내 현실에 비춰 거론하고, 국내법 개정에 해당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고 의견을 내면서 사이버상의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것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였다. 후속 과제로 제3, 4... 의 부다페스트 추가협약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국내·외 정서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역시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작성자 : 정다현

세션명	바람직한 데이터 주권 모델에 대한 고찰			
일시	2023. 7. 7. (금), 13:00~14: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정다현, 순소영, 임주영, 박해든
	패널	심동욱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공계)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사회)		
		이인호 (중앙대학교/학계)		

제안내용

'주권(sovereignty)'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체결 이후,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주권이 인정되었고,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 개념은 영토를 경계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무형의 자산 성격을 지닌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주권의 개념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의 소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전통적인 주권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주권'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의 실효성이나 작동 방식을 논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사안을 조망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인도 정부가 틱톡과 위챗 등 중국산 모바일 앱들을 인도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차단하는 사례, 미국의 기업들에 맞서서 EU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강화를 시행하는 사례 등을 살펴보면, 데이터 주권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따질 것인지, 안보를 따질 것인지에 따라 문제의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관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는 국가, 기업, 개인의 행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경제학적, 그리고 데이터 불평등과 같은 인권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빅데이터로 근대 국가의 주권개념이 침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측면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만큼, 어떠한 데이터 주권 모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책 기조 및 방향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클라우드법'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 및 자유로운 유통을 추구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17년 시행된 '인터넷 안전법'을 통해 공익을 해치는 데이터를 검열 및 통제하고, 중국에서의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이터 주권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데이터 주권의 움직임이

	경합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데이터의 국외 및 국지화의 문제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차원의 데이터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무형의 자산인 '데이터'를 규제하는 모델은 각 국가의 데이터력과 사이버 보안 인식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기존 모델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국가 내 정책 배경과 연계해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어떠한 모델을 채택해야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약내용	데이터 주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에 데이터를 누가 독점하는가의 문제, 또 국가와 개인 간에 데이터 주권이 누구에게 통제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데이터 주권은 독점하고 통제하는 두 문제 사이에 상반된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소유하는 주체는 데이터에 대한 수익을 독점하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노동이나 수익 배분 구조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국가 중심으로 지나치게 통제하게 되는 경우, 국가 아래 데이터가 감시되는 국민들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통제 체제에 종속되어 인권과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데이터 법안의 기조와 학계 내에서 내비춰졌던 목소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가시화되고 강조되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 육성,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의 통합과 통계의 효율성, 그리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는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국외적 데이터 편중과 독점의 문제에 우리나라가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중심의 데이터 산업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대중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통제될 것에 대한 우려나 문제는 아직까지 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주권을 국제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바 있지만, 발표에서 제시되었던 두 번째 문제, 즉 데이터 주권이 국내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셸 푸코가 발표했던 유명한 개념 판옵티콘처럼 국민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을 통제하는 새로운 빅브라더 체제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 육성에 대한 방향성은 적절하나, 독점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서야 가시화되었던 점을 들어, 대외적으로 미국 주도의 비대칭적인 흐름에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중심의 데이터 산업에 대해 국민 또한 데이터 주권을 지니고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의 데이터 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단체 및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논의 세부	1.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주권'이란 가장 주요한 권리로 근거가 필요한 개념인데, 데이터 행위자 중심으로 정당

내용	화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주권 개념은 국가의 주요한 사항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데이터의 맥락에서 '주권'의 개념을 가져왔을 때,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국가의 권한으로 인식되어왔던 것들이 이양 가능한 것인지, 또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해 관계자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소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다른 시각에서는 데이터 주권 개념이 빌려다 쓰는 개념이므로 국가, 기업, 국민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기업에게,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일반 개인에게, '주권'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쟁점들보다는 행위자 간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 논의가 선행되고 해결되어야 함이 역설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데이터 행위자의 입장에서 '데이터 주권'을 대신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의 구분과 개인정보 보호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생성률은 세계 5위라고 한다. 데이터의 양 자체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 유통되는 데이터는 그 5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개인 차원의 주권을 들어 개개인이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에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언급되었으나, '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이러한 필요성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송 요구권을 충족하는가와 신뢰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다. 별개로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그 외의 데이터는 시놉티콘과 같은 형식으로 공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피력되었다.
워크숍 총평	1. 워크숍 내용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한민국에게 적합한 바람직한 주권 모델을 찾는 것이었으나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음. 발제자들 다수가 인터넷 거버넌스 필드에 최근 입문하게 된 만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해당 워크숍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풍부하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들로 거듭나기를 기대함. 2. 워크숍 진행 형식 사회자의 진행 아래, 40분가량의 발제, 전문 패널 토론 발제, 그리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전문 패널 발제와 플로어 질의응답에 부여된 시간은 총 50분이었으나,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음. 각 패널의 발제 시간은 적절했으나, 패널 발제에 답변할 시간과 토론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음. 각 패널

	발제에 대한 토론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예상되기에 아쉬움이 남음. 워크숍 주 발제의 발표 시간 자체를 줄이고 토론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았더라면 좋았을 듯함. 또한 패널뿐만 아니라, 플로어의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 청중 질의응답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그리고 청중이 미리 발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던 점이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가지 못한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됨. 이후 워크숍을 구성하게 된다면 청중에게도 발표 자료가 먼저 공개되는 방식이 고려되면 좋을 듯함.

작성자 : 오병일

세션명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2023. 7. 7. (금), 14:40~16:1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시민사회)	발제	전응준(법무법인 린, 변호사/시민사회)
	패널	하신아(웹툰작가노동조합/창작자)		이예림(업폴/AI 산업계)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계)		김혜창(한국저작권위원회/공공)

제안내용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특정 작가의 그림 스타일을 모방한 그림을 생성하여 해당 작가들이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AI의 결과물이 해당 작가의 작품 자체를 모방한 것은 아니라도, AI 학습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사용되어도 되는지, 어떠한 저작물의 스타일(문체, 화풍 등)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나아가 AI를 활용해 생산한 저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되는 등 법적으로 명확한 상황은 아니다. 이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창작자의 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혜택의 향유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생성적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 보호대상인가 공정이용인가 – 저작물의 스타일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가, 보호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요약내용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권 체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AI 기술 및 단계별(학습과정, 이용과정)로 구분하여 논의 필요함. (창작자 관점) 창작자 역시 생성형 AI를 도구로 이용할 수 있으나 창작은 작가가 하는 것인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AI 개발업체) AI 업체도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보상에 대한 룰이 정해지는 것이 산업계에도 도움이 됨. (학계) 생성형 AI의 창작은 기존 지적산물에서 추출하여 재가공한 리믹스임. 그 정도에 따라 퇴행적 모사에서 새로운 창작까지 다양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새로운 공공적 저작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공공) AI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이 저작권법의 과제이며, AI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함.

논의 세부 내용	1. 발제자인 전응준 변호사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저작권 논란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함. AI 기술 발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AI 산출물의 표현력 수준이 향상되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어떤 AI 기술을 얘기하는 것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고, 단계별(학습과정, 이용과정)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후 퍼셉트론, GAN, Stable Diffusion 등 주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요 및 이에 대해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 소개함. 2. 첫째 의제 :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 이예림 : 이미 산업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챗GPT를 많이 쓰고 있어, 이미 일상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 하신아 : 창작자가 생성형 AI에 의해 피해를 받는게 아니라 창작자를 존중하지 않는 집단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임. 인공지능은 브레인스토밍이나 해외 자료를 번역할 때,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창작자에게도 유용함. 그러나 AI는 작가의 도구일 뿐 실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작가임. - 이광석 : SNS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배달노동 등 무형의 자원과 관계를 배치, 큐레이팅하는 AI가 이미 활용되고 있었음.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언가 만들어낸다는 것. 그러나 그 아래에 깔려있는 것은 '추출주의'임. 즉,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추출한 것을 재가공, 리믹스 하는 것임. 이러한 추출 단계가 비가시적 영역에 있다는 점이 생성형 AI의 문제. 저작권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이고, 정신노동을 자동화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 맥락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김혜창 : 오래전부터 AI와 저작권 문제를 얘기했지만 챗GPT 등장으로 국면이 많이 전환됨. 이해관계의 조정이 저작권의 과제인데, 유럽연합에서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학술 목적으로 허용하던 것에서 상업적 목적으로도 허용할 것인가가 이슈임. 디지털시장지침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보았지만, 영국에서는 창작자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음. AI는 창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작자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기 되기도 함. 3. 둘째 의제 : AI 학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 하신아 : 학습데이터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프롬프터의 역할은 영역마다 다를텐데, 예를 들어 웹툰/웹소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없음. 갑을 관계에서 작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 용인되어서는 안됨.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놓은 상황인 경우는 그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인공지능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함.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기존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됨. 이는 단지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광석 : 생성형 AI의 문제는 사유의 외주화한다는 것임. 우리가 창작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바꾸게 됨. 그런데 추출의 근거에 대해 오픈 AI는 투명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음. 리믹스 행위는 최근에 창작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디지털 문화인데, 원본에서 멀어질수록 창작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음. AI와 같은 기계가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함. 즉, 저급의 복제에서 창작성이 있는것까지 스펙트럼이 있을 것임. 퇴행적 모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적용하고, 원본의 기억이 사라진 생성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통 저작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기존 저작권 시스템의 틀 내에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적인 가치로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함. - 김혜창 : 기존 TDM 인정은 저작물을 표현적 형태로 (감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데이터로만 활용했다)는 것인데, 생성형 AI로 와서는 그 결과물이 향유와 같은 형태가 된 것이고, 그래서 논의의 구조가 달라졌음. 생성 AI로 수익을 냈다면 학습 데이터에 보상하는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그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사전 허락을 요구하게 되면 학습과 AI 발전에 저해가 될 것임. 그래서 이를 원활하게 하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예림 :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어라는 것이 논점을 흐리는 측면이 있음. big이 아니라 얼마나 good data인지 물어야 함. 저작권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학습해야 함.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사람들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성능이 향상됨. 보상에 대해서도 어떤 룰이 있어야 산업계에도 도움이 됨. - 전응준 : 저작권법은 사람의 기억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는데, 기계에 의한 복제와 구별됨. 그런데 패턴 기반 기계학습은 사람의 학습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음. 즉, 영리목적의 AI 학습도 사람의 학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열어줘야 하느냐는 얘기가 될 수 있음. 4. 셋째 의제 : 생성형 ai가 창작자를 대체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광석 : 지식 노동에 대한 대체가 될텐데, 전기자동차같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이러한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김혜창 : 사진과 비슷할 것임.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 물론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도 곧 AI가 따라갈 수 있음. - 이예림 : AI에 의해 어떤 저작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파악될 수 있고, 그럼 보상이 더 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디지털 문화 방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지. - 하신아 : AI가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임. - 전응준 : 사회적 차원의 저작권 보상체제는 필요하지만, 라이선스 모델로 가면 대자본

	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라이선스 모델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님.
워크숍 총평	각 이해관계자보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슈가 달라서 애초에 설정했던 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관점과 견해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이번 토론회에서 다뤘던 각 이슈에 대해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후속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작성자 : 이예진

세션명	이상적인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워크숍			
일시	2023. 7. 7. (금), 14:40~16:1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민병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	박채원, 이예린, 이예진, 정다현, Hamed Ayeh (이화여자대학교)
	패널	이창범(김앤장법률사무소/시민)		
		이화영(사이버안보연구소)		
		김영진(드림시큐리티/산업체)		

제안내용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각기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대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 노력의 흐름을 살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입법 발의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대해 실효성 등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특히 2022년 10월 카카오대란 이후 현 정부가 사이버 안보 이슈를 분리한 바 있다. 새로 입법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의 사이버 안보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와 단체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컨트롤타워 기관의 역할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했다.
요약내용	1) 사이버 안보의 문제점 - 국내 법제 변화: 국가 사이버안보 법안 제시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설립 -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최근 국제 이슈 정리 -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 처벌, 규제, 거버넌스, 소통을 중심으로 2)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 쟁점 분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관련 법안 및 기관 분석 - 첫 번째 쟁점: 명확한 컨트롤 타워의 존재 - 두 번째 쟁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민관협력체계의 균형 3) 한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방향성 -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의 개선점 및 향후 과제 제시 1.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공조기관의 필요성 2. 공조기관을 통한 외교 정책 구성
논의 세부	아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과의 논의 및 토론을 진행함. 1. 사이버 안보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 및 개인의 목소리를

내용	통한 상호작용의 중요성 2. 대한민국 정보통신기관법, 민간, 공공, 군부문에서의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의 뛰어난 코디네이팅 및 각 국가별 문화가 반영된 제도 건설이 중요성 3. 민관협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총괄기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예시
워크숍 총평	1. 워크숍 진행 형식 - 발표 시간: 사회자의 진행 형식, 발제조의 발표시간은 약 40분으로, 패널의 피드백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적절했음. - 패널 발제 시간: 각 패널에게 주어지는 발제 및 피드백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음. 각 패널의 발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시간과 토론을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음. - 분임토론: 패널뿐만 아니라, 청중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토론을 활발히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낌. 청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청중에게도 선공개해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2. 워크숍 진행 이후 - 워크숍 진행 이후, 다양한 청중과 패널의 발제 및 피드백을 통해 한 가지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시각을 키우게 됨. 이를 통해 발제조는, 제시한 두 가지 큰 쟁점을 수정하고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관점 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다뤄보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모델을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다뤄보고자 함.

작성자 : 한 성 철

세션명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방향			
일시	2023. 7. 7. (금), 14:40~16:1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정일진(17정글 스튜디오/대표)	발제	
	패널	한성철(코리아머천트쉬핑/부장)		김채린(서울대/학부생)
		이현진(단국대/학부생)		김지윤(숙명여대/석사과정)
		김윤지(부산제일경제/기자)		김진식(아주대/박사과정)
		박종민(정보통신산업진흥원/책임)		

제안내용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부상은 기존의 사회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들은 인터넷과 함께 태어난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인터넷의 주요 사용자이면서, 개방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입니다.따라서 인터넷 기술이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인터넷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사람 중심의 가치와 디지털 민주적 참여의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향후 기업가 및 정책형성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입니다. 이 세션은 청년세대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요약내용	-청년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주체이기에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청년의 역할은 더욱 더 도드라 질 수 있으며 청년 자신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유스 세션(Youth Session)'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KrIGF처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럼 워크샵 회의 등을 주위 청년들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청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회의는 대부분 평일 오후에 개최 됩니다. 하지만 생업에 바빠 참석을 원하지만 참석을 하지못하는 청년들이 많기에 해당 청년들의 참석 유도를 위해 주말 또는 평일 저녁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

	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충돌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 그리고 청년들이 이러한 충돌되는 의견을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 종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법령은 작은 정보라도 개인정보라는 범주안에 잡혀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법령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지금 당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지금 만들어 나가고있는 거버넌스는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중요한 매뉴얼이자 통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신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집중도라던지 주목도가 더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 무수하게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모두 다 그 존재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한 청년들의 의견,목소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말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 생성 및 청년들에게 홍보 및 청년들의 의견 및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개선이 필요 합니다. - 인터넷이 연결될 수 밖에없는 초연결 사회가 형성되며 자동차를 비롯한 선박들의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에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큰 관점에서 보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각 각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청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논의 세부 내용	요즘 청년들이 ‘불완전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식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과 솔직한 감정을 SNS라는 공간에 공유하면 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지내다보니, 팔 워가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자신만의 직업으로 만들고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이기에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청년의 역할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목소리’가 원활히 순환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유스 세션(Youth Session)’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증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과 이를 공론화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다른 세대에서 나오는 인터넷에 대한 의견과 불편함을 이해하려는 ‘포용력’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기관에서는 청년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 을 법제화와 정책화 과정에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을 접해온 세대로써 더욱 더 인터넷과 친밀하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의성 소통 정보 접근성 그리고 기술적 혁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훌륭한 사용자라고 할 수 있지만 훌륭한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기에 체계적인 역량을 개발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rIGF처럼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의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럼 워크샵 회의 등을 주위 청년들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청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삶을 살고있지않는 청년들 예를 들면 생산직 일용직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청년 참여 거버넌스나 정부위원회 회의가 평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당연하게도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유가 그들 당장의 생존과 연결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바람직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것인데 현재의 삶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담보 할 수있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참여를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 세대 자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소외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그 요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견을 인터넷 공간에서 말했는데 그 의견이 검열 당했다고 느끼는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강하게 보호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었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정부가 좀 더 개입하고 그런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둘이 굉장히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도 각자가 속해있는 배경에 따라서 인터넷 공간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느끼기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이 두 가지 이슈가 경험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BBC라고 해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인공지능으로 활용하는 바이오 산업 즉 의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책적으로나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정책중에서 가장 제한이 됐었던 건 현재 의료데이터를 모으는데 있어서 조금 큰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의료 데이터란거 자체가 작은 범위로는 의료 데이터지만 큰 범위로는 개인정보 속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의료 데이터 중에서 대부분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게 어떤 사람의 나이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CT 촬영을하면 촬영한 사진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조차 개인정보라는 그 틀 안에 박혀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퍼트려도 그것이 어떤 특정인 분야한테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나 법령을 조금 개선해서라도 산업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MZ세대 라는 신조어의 등장과 함께 새대간에 표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익숙하게 듣고있는 세대의 표현으로는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고있는 기성세대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 MZ 세대,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의 세대가 더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바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세대인 알파 세대입니다. 알파세대는 어렸을때부터 기술적인 진보를 바탕으로 그런것들을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입니다. 현재 인터넷 거버넌스를 받아들이는 앞으로의 세대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제가 다양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쉬고 어떻게 여가활동을 지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지켜본 결과 유행에 정말 민감하고 빠르게 적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수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 뜻은 이상적이지 못한 컨텐츠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온전히 수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인터넷 거버넌스라는게 어떤 영할을 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세대에게 있어서 인터넷 거버넌스는 지금 당장으로써는 목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고있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따르며 성장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알파세대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매뉴얼이자 통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신념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집중도라던지 주목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 총평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유스세션‘을 통하여 청년들이 인터넷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양한 청년들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세션이였습니다. 점점 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와 KrGIF를 비롯한 포럼 및 참여가능한 회의등을 통하여 각자의 생각을 표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하면 사실 엄청 큰 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스세션을 통하여 조금 작아진 틀 안에서 각 분야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할 수 있는 좋은 세션이였습니다.

작성자 : 황동준, 손세원

세션명	AI 거버넌스의 이슈(GPAI)와 한국의 대응방안			
일시	2023. 7. 7. (금), 16:20~17:5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유인태(단국대/교수)	발제	황동준(단국대/학부생)
				김현주(단국대/학부생)
				이주원(단국대/학부생)
	패널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교수)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제안내용	AI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지만, 관련 거버넌스의 개별적 이해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2020년 OECD에 기반하여 출범한 GPAI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GPAI 내에서 워킹그룹인 '책임성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일자리의 미래, 혁신과 상업화'라는 4가지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요약내용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신흥분야에서의 이슈들을 AI에 관한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인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산하의 4개의 워킹그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워킹그룹이 다룬 바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한 각 국들의 대응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킹그룹에 대하여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한 '책임성 있는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해당 이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GPAI의 정책적 권고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EU와 다국적 기업들의 대응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해 동반되어야 하는 민간 역량 증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차원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일자리의 미래'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의 AI 인재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국내에서 현재 추진 노력 중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혁신과 상업화' 측면에서 미국, 영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관련된 정책적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부족한 점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각 워킹그룹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구성된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논의 세부 내용	● **AI와 데이터 간 연계성에서의 편향성 문제 및 한국의 대응방안: 투명성을 중심으로 (황동준)** GPAI는 2020년에 주요국들이 필요성을 인지하여 마련한 기구로 이론과 실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다중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다.

AI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산출하고, 이를 반복하며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RAI(책임성 있는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워킹그룹을 연계한다. RAI는 인간 중심적이고 공정하며 공익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AI 등을 목표로 하며,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AI용 데이터가 수집, 사용, 공유, 보관 및 삭제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RAI는 AI개발 모델링 방법과 이에 어떤 데이터 SET가 사용되는지 등을 다루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책임감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등을 다룬다. 기술적 차원에서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이를 다시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발전하고,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대표성이 부족할 경우 프로세스나 결과물이 해당 편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아마존 채용 프로그램 및 미국내 법죄 예측 알고리즘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AI와 데이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에 대하여 GPAI의 정책적 권고사항 중 하나인 AI의 알고리즘 정보, 데이터 수집과정 및 사용 정보 등을 공개해야한다는 투명성 측면에 집중하였다. 투명성에서도 설명가능성이 현행 정책적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바라보았다.

관련하여 EU의 GPDR 13조~15조에 따르면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에 질문 및 반박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 해당 주체에게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등 유럽은 개인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며 선도적인 모습이다. 이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어 아마존과 구글은 EU에서 법제화된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및 이슈에 대하여 개인들이 관련한 지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 오프컴과 BBC방송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알고리즘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과 권고사항만이 존재하고 대기업들의 반대로 실질적인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목적과 성격이 불명확하며 이에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민간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의 미래 (김현주)**

일자리의 미래(Future of work, FoW)라는 작업반은 일자리에서 AI를 활용하여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관련한 내용 중 미래 인력 양성에 대한 AI선도국들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민간주도로 AI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을 하고 있으나, 교육 등 공공 영역에서는 정부도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BAT)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산업계 협력을 통해 AI와 데이터 경제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 발전 전략과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보건사업 진흥원의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인력양성 정책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크게 다섯 개의 시사점 및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 인력양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후속 세부계획을 발표하거나 타 정책에도 기존 인력양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AI 인력양성 정책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
2. AI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의 역할, 특히 석·박사급 인력양성과 함께 글로벌 고급인재 확보를 강조
3. AI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 및 기업의 역할을 강조

4. 초·중·고등교육 단계부터 AI를 교육하거나 AI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STEM 분야 교육을 강화
5. 일반 국민, 사회인, AI 비전공자 대상 AI 관련 보편적 교육 확대를 통해 사회의 AI 수용성 향상을 모색

한국도 일관된 AI 인력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AI 인력은 수준에 관계없이 부족하며 국내 기업들도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관·학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AI 인재의 양성 및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고급 AI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학, 컴퓨터 공학 등 기초 과학과 연관 학문의 뒷받침이 전제 되어야하므로 초기 교육단계에서부터 AI 및 STEM 교육 투자를 통해 데이터 과학 및 컴퓨팅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AI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 등 산업 육성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의 부처들을 통해 이미 추진 노력 중에 있으며, 그러므로 기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AI 인재 선두국가의 입지를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상업화(이주원)

혁신 및 상업화 워킹 그룹은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AI 연구개발과 혁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연구 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PAI의 혁신 및 상업화 워킹 그룹의 논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들이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AI 상업화와 경제 전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제에서는 AI의 혁신과 상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 중 특히 각국 정부가 AI의 혁신과 상업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인공지능의 혁신과 상업화는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맥킨지, PWC, Accenture,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시장기관들은 AI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각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Tortoise Intelligence의 Global AI Index,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ICT 기술수준조사에 의하여 주요국으로 분류한 국가들 중 미국, 영국, 중국, EU, 한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정부가 전략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AI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인간-AI 협업 방법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미국 수출입 은행은 관련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 국방 등을 중심으로 AI R&D와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민간이 R&D를 주도, 정부는 장기적 연구 분야 및 공공분야 중심으로 개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영국 또한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여러 AI전략을 발표하였다. 산업계를 위한 지원 환경의 필요성 지적하고, AI 연구, AI 활용 등 4개 분야 정책 권고를 제시하였다. 국가 AI 전략(2021)은 경제 성장을 위한 요소를 다수 포함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AI의 경제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며 가볍고 친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계획(2017)에서 중장기적인 목표와 중점 임무들을 제시하였고, 차세대 AI 오픈 플랫폼(2017, 2018, 2019)에서 15대 플랫폼 분야 각각 선도기업 선정하

여 대규모 투자 진행하였다. 반도체 공급망 붕괴에 대응하여 반도체 자급을 위한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시장 창출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중점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EU는 EU 반도체법(2022)을 통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유럽 데이터 전략(2020)에서는 단일 데이터 시장 형성 목표로 하였다. EU는 법안의 제정이나 법적인 프레임워크 구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점하고 있으며, 반도체나 원자재 같은 핵심기술과 자원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이나 데이터 연구 등 유럽 전체의 통합과 공동 대응을 추친하고 있다.

한국은 AI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2018) 인공지능 R&D 전략(2018)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023)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정부주도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뤄졌고, 공공데이터의 개발이나 AI허브와 같은 데이터 부문에 대한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들은 AI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AI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컴퓨팅 자원을 연구 및 민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업 강화하였으며, R&D 지원 강화 및 인재 양성을 강화하였다.

한국도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AI에서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부족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AI 도입이 저조하다. 연구 역량 지표가 비교적 낮으며 AI 인재난에 처해있다. 반도체와 같은 강점에 있어 타 국가에 비해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고, AI상업화를 위한 법제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간다면 인공지능의 혁신과 상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종원 교수:

GPAI에 대해 첨언하자면, 한국은 2020년에 가입하였고, 국내의 전문가들도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하여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있다. 또 올해 5월 G7 정상회담에서 AI 규제 방안으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기로 선언하였고, 이를 추친할 실무 국제기관으로 GPAI가 선정되었다.

발제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면,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 워킹그룹은 인간중심의 책임성 있는 개발, 활용, 도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 설명가능성,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과업으로 하고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 워킹그룹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데이터의 접근, 데이터의 공유,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평가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반복하여 그 성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냐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발표자가 말해주었는데, 여기서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테이나 이루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이 우리가 우려하는 인권, 평등 등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투명성 차원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에 대한 이유 등을 개방하고, 해당 시스템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오픈 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의 수집에 관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기업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겠다.

한국의 노력 중 법제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 AI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21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법제화 된 것은 아니며 자율 규범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2020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고,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네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12개의 세부 과제의 추진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등을 구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공지능 세상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직 변호사:

AI와 일자리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그에 대한 보상 방식이 AI 시대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정신 활동을 대체하는 AI가 등장하면 노동이 대폭 줄어들고 기술 분야의 노동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의 월급을 보상으로 하는 남을 위해 일하는 시스템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고용하는 시대로 가게 된다. 자기 스스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불규칙해질 것이다. 이것에 대응하여 자본과 기술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노동이 혁신되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자본과 기술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혁신과 상업화에 대하여, 혁신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사람, 규제, 금융이 있다.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과 종교박해를 피해 네덜란드로 간 기술자들의 사례는 규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규제의 내성을 가진 방식으로 AI 기술력을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AI 기업들이 혁신해야 할 부분은 위험 통제 역량이다. AI시대의 위험은 서비스 자체의 구성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CSR, ESG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받았다면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혁신 전략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과 EU는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규제를 이겨내는 기업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EU는 그들 체재 하에서 단일시장으로 내수시장을 키워 생존하려 한다. 반면 한국은 이들과 환경과 역량이 다르다. 한국은 AI에 관하여 기술맵과 서비스 맵을 그려야 한다.

AI와 편향성 부분에 대하여 첨언하여, 편향성과 불합리를 잘 구분해야 한다. 성차별, 장애인 차별, 인권의 무시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을 편향성으로 보되, 불합리성을 전부 안된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불합리함을 포함하는 기업 활동, 인간의

	불합리가 반영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현행법을 통해 편향성을 방지해야 한다. 윤리기준도 추상적인 것보다 기업들 스스로가 아이덴티티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애플같은 경우 핵심적인 가치로 고객의 인권보호에 개인정보 보호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기업도 장황한 윤리기준보다 핵심 가치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AI 활용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이상직 변호사: AI 시대는 기존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등 민감한 정보라고 하여서 투입하지 못하게 하면 AI를 통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들이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주체가 동의를 하거나 저작물에 대하여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래선 AI 시대의 혁신이 저하된다. 이러한 방식보다 기업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서 공동체나 개인에 보상하는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종원 교수: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공 처리 및 익명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손세원 학생(세션참여자):** 거버넌스의 역할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경기도의 '데이터 주민 배당'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될 텐데, 이를 제공하는 데이터 주체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워크숍 총평	AI라는 신흥이슈에 대하여 GPAI라는 인공지능 국제 협의체에서 실제 다루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취지에 맞춰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발제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다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발표를 조금 줄이고 토론 및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작성자 : 여인표

세션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일시	2023. 7. 7. (금), 16:20~17:5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F
참석자	사회	이수영(정책과 입법연구소/의장)	발제	
	패널	여인표(메타플래그/산업계)		김다예(국립목포대학교/청년)
		김민찬(초코뮤직/대표)		이동학(쓰레기센터/대표)
		조영우(우짜/대표)		박슬기(지금지구/공동대표)

제안내용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자문서법 제도를 기반으로 행정체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종이문서 사용량 50%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업무혁신과 ESG 가치 창출 등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등은 모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인터넷 기반 융합 신기술을 적용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감축기술(mitigation tech)과 기후변화 적응기술(adaptation tech)이 대표적이다. 독일의 경우, 인공지능을 에너지, 자원보호 및 순환경제, 수자원, 공해 방지 및 건강, 자연 보호 및 모빌리티 등의 응용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EU의 그린 딜의 목표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 등 디지털 기술을 기후문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세션은 전자문서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인공지능, 스마트 그린시티 등을 주요 아젠다로 다루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축으로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다. 나아가,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에 입각해 인터넷 거버넌스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친환경산업과 정책, 글로벌 녹색성장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요약내용	우리는 왜 인터넷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SDGs와 환경문제를 다루는가?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이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 기후위기에서 디지털 기술의 기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가능한가?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환경이슈가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후문제 관련 국내외 논의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 세부 내용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터넷 접속 속도로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은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경 제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자들의 디지털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곧 물리적 자원을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것을 뜻하고 이것이 곧 기후위기 속에서 디지털 기 술은 기회이며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에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툴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흐름도 디지털화에 성큼 다 가가고 있는데요, 곧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단계 별로 도입되죠. 현재 교육 과정과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학교에도 디지털화, 에듀테크 기반으로 나아 가기 위해 그린스마트 학교라든지,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온라인 학습 플랫폼 이용 등으로 정책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크다는 아쉬운 목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의 기회를 어떻 게 실현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방향 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려합니다. 교육자들의 역량 차이, 관심도의 차이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대상들의 디지털 접근 성, 문해력 등의 교육적 효과 차이는 적어도 나지 않아야 한 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교육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가 구성, 진행될 때도 기술 발전 중심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 제에 대한 인식과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도 풍부해질 수 있 도록 그리고 그것이 학교 교육에도 묻어나 학생들에게도 전 해질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도 고려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 증강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콘텐 츠들을 이용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술 체험형 교육 콘텐츠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체험하고 정보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탄소 발생량 및 저감 현황을 시각 데 이터로 변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메타버스를 통한 친환경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점에 서 굉장히 시사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AR을 활용한 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시키 고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프로젝트로 개발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재의 기술에 집중된 모습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계, 산업계, 교육을 받는 대상 등 다양한 시민들과 공정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하여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여러 방향성을 가진

	콘텐츠들 을 접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디지털 기술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그리고 평등하도록 특히 취약계층에게서 디지털 격차, 소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많 은 관심과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취약계층 등 여러 계층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개 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 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중소도시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소형 '스마트시티' 4곳을 포함해 14곳의 스마트 시티가 전국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IT) 등을 융복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조성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스마트 시티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접속은 스마트 기술의 효과적인 기능, 데이터 수집 및 다양한 시스템 간의 통신을 위해 필수적 입니다. 강력한 인터넷 인프라와 광대역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은 스마트 시티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스마트 시티 개발에 통합하면 디지털 기술과 연결성이 책임감 있고 포괄적 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및 스마트 시티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정책 입 안자는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형평성 고려사항을 유지하면서 기후 완화 및 적응 노력을 지원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거버넌스는 모든 시민이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며, 취약한 지역사회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접근성과 포괄성을 촉진함으로써 기후 대응 전략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도달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크숍 총평	- 스마트 시티와 환경교육, 그리고, 기후 관련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여를 전체적으로 다루어 인터넷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인터넷 거버넌스와 탄소중립 등 환경 이슈 간의 상호 연계성을 처음 시도한 세션으로서의 가치는 크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패널들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그리고 기술적 기회보다 환경문제 전반에서의 어려움을 다룬 점은 아쉬운 점임.